

■ 무엇을 논의하나

의제와 전망

# 비핵화 해법 찾고 남북관계 업그레이드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이어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핵심으로 남북 간 쌓여있는 솔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인 해법 도출로 동북아 평화 무드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남북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평화체제 전환·교류협력 등 핵심 의제 北선 경험 확대·보안법 폐지 주장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4가지 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북핵 폐기 해법을 찾아라=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북핵 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핵 폐기 프로세스 진행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해결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난항해 보이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북핵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시된다.

▷평화체제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하라=한반도 비핵화 문제와는 별도로 평화체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종식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화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요하겠지만 ‘평화선언’만으로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등 평화체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그 근거다.

▷경협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라=이 같은 거대 담론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



으릴 전망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논의들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그 파이를 조금씩 키워왔지만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에서 나타나듯 남북 경협은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사실이다.

▷군비통제·NLL·남북자 해법도 찾아라=북한의 핵 문제와는 별도로 군비통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지난 2000년 9월 이후 7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북방방계선(NLL) 문제와 남북자 문제도 짚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어떤 의제 들고 나올까=김정일 위원장이 제기할 의제들은 주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정치·군사 현안의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남측이 당사자로서 서해 북방방계선(NLL) 재설정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남측 방문자의 김일성 주석 묘지인 금수산기념궁전 등에 대한 참관 제한 철폐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이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른바 ‘근본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언임을 거듭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종식되고,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뉴스 기자 tuim@kwangjuju.co.kr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오른쪽부터)이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발표하기 위해 발표문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회담 성사 주역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남측에서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공개됐다.

김 원장은 2006년 11월 45년 만에 첫 공채 출신 국정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그동안 국정원장은 군 출신이 주류였고 검찰이나 정치인 출신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출신 원장 기용은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세종연구소 파견 시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연을 맺은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정보관리실장으로 당시 이종석 NSC

### 南 김만복 국정원장·北 김양건 부장 결정적 역할

사무차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눈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라크 파병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남들이 기피하던 이라크 파병안 수립을 위한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게 그에게 오히려 행운이었다. 이 때문에 그가 2004년 2월 국정원 기초실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그를 적임자로 찍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김 원장 이외에 국정원 내에서는 서훈 대북담당 3차장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훈 차장은 2000년 1차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도 박지원 특사와 통령,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대북 접촉선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측의 김만복 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번 정

상회담에 합의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다.

2000년 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의 총애를 받던 김용순 당 비서가 막후에서 지휘를 하고 송호경 당시 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다. 이번에는 김양건 부장이 직접 나서 정상회담을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권내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5년 6.17명담에도 배석했고 지난 3월에는 김 위원장의 중국 대사관 방문에도 동행했으며 국방위 참사 자격으로 6자회담과 관련된 사안을 실시간으로 챙겨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말뉴스

### 노대통령 평양 방문 남북합의서 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상봉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 ■ 어떻게 준비하나

#### 다음주 남북 차관급 접촉 실무 논의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 2개월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회담까지 20일 밖에 여유가 없어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신속하고도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상회담 과정을 지휘, 조정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실무 집행을 위해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이뤄진 준비기획단과 통일부 차관과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로 이뤄진 사무처를 각각 발족시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진용을 갖춰 다음

주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실무접촉을 갖고 회담 실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 형식과 횡수, 선발대 파견, 의전, 경호, 통신, 보도 등 회담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 의제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양 정상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사전에 구체적으로 의제를 못박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도 특정 의제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의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말뉴스

### ■ 방북단 누가 참여하나

#### 세계·예술계 등 특별수행원 참여할 듯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을 수행하는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윤병세 안보정책수석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특사로 활동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야 정당대표와 사회·경제단체, 기업인, 예술·체육계 인사들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번에는 어떤 인사가 ‘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북수행단이 정부 공식수행원 외에 특별수행원으로 확대되고 여야 정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당 인사들도 방북 대표단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2000년 당시 방북수행단에 사회·경제단체 대표로 강만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참여했다.

이밖에 세계에서 유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육·예술계 대표로는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고은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고문, 차범석 예술원 회장 등이 각각 참가했다.

연말뉴스

Advertisement for 'Seogi Bocheonggi' (Seogi Bocheonggi) featuring a dog and text: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1588-8499 080-222-0100'.